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수사기록 20만쪽 제출

검찰 "심의도 예정대로 진행"...발부 땀 심의위 사실상 무의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속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사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장이 청구되지 않길 바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

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은 승계작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풀옵션 공시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다. 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다.

김종중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

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제안으로 추진됐고, 미진실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수사팀은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각각 약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수백 쪽의 의견서를 냈다. 법원에 제출한 그간의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 7월 및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을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KCC 본사, 삼성생명 본사, 삼성자산운용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

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엔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잇따라 부르며 막판 혐의를 다졌다.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잇따라 출석했고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최지훈 이사회 의장(사장), 옛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사장)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삼성의 수사심의위 신청과 관계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예정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혐의가 소멸됐다는 측면에서 수사심의위 개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뉴스1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사용교육 4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사용교육에서 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직원들과 지역 자원방재단 등 대표가 수방자재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퇴직 공무원 무더기 재채용 '신안군 압수수색'

민선 7기 출범 이후 상당수 채용 사업부서 근무

검찰이 4일 전남 신안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목표지청은 이날 오전 박우량 신안군수실을 비롯해 기획실, 행정지원과 등 신안군청 청사 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해당사무실에서 컴퓨터 자료 등을 다운 받는 등 인사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특혜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퇴직한 5급과 6급 간부출신 10여명이 군 출장소 등 사업부서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신안군 임기제·기간제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이 채용됐다. 이들의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9월 개채굴양식 전문인력 1명, 공원, 도시계획 전문인력 4명, 2019년 3월 농업기계·식물조직배양·관광·홍보 9

명, 섬가꾸기사업 1명, 1004섬 조성사업 1명, 미술관·도서자생식물연구·SNS기획·바둑분야 4명, 갯벌지질분야 1명, 스마트양식분야 1명 등이다.

현재 이들은 고이도 출장소와 도서개발과, 공원녹지와 등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는 150여만원으로 박봉이다. 모집을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며 "낙도에서 애정이 없으면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공고를 통해 이뤄진 채용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오락가락 한노총 차산업 망치지 말라"

현대차 현장조직, 한노총 정면 반박... '노노갈등' 비화

"오락가락 행보로 더 이상 자동차산업 망치지 말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3일 평소 '광주형일자리 반대' 입장을 대변해온 완성차 노조에 쓴소리를 하자 현대차 내 강성 현장조직에서 4일 이 같이 반박하면서 광주형일자리 둘러싼 '노노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내 혁신민주노동자 등 일부 현장조직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이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는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며 실망을 안겨왔다"며 "더 이상 국내 자동차산업을 망치지 말고 꺼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는 2018년 6월 광주형일자리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경차 수요 포화', '저임금 일자리 확대', '다른 지역 노동자 일자리 위협' 등의 이유를 내세워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말 새로 취임한 이상수 노조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마당에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대차는 더 큰 피해를 입기전에 광주형일자리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이에 광주형일자리 논의에 복귀한 한국노총 광주지부는 3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대기업 노조 간부들의 반연대적 행위로 규

정한다"며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올리기 위해 노동의 참여를 짓밟는 사업주의 지시에 순응하고 나아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착취구조에 편승했던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을 반성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기업보다 임금이 적을지라도 노동자들이 주도해 임금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고 격차 해소에 도움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사실상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한노총 광주지부는 또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근거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저임금과 저수련 일자리'라고 한 데 대해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서로 의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산업을 고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높은 노동비용과 짧은 노동시간에도 일자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최강국 독일이 취한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를 빗대 "기업 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으며,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포기하고 착취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